

전남도, 고령화시대 예방 중심 건강관리 정책 ‘박차’

맞춤형 통합건강 증진·도서 의료 서비스

취약지 방문형 확대·디지털 고도화 강화

전남도가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매·정신건강 증진,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율과 의료 인

프라의 지역별 차이가 크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급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 등 12개 건강생활 영역을 통합 운영하며 찾아가는 건강버스 2대를 운행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천641명을 등록·관리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 효과를 높였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만2천명의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 순천성가톨릭병원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전문의 상주와 집중치료실 운영 등 전문치료체계를 갖췄으며 2026년 서부권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추진해 전남 전역의 전문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안심마을 111개소 운영 및 병원선 진료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연구·예방·치료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AI·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22개 시·군으로 확산하면서 혈압·혈당 등 주요 건강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크게 높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건강격차를 줄이고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

이다.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방문형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고도화, 국립심뇌혈관센터와 권역센터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의 건강 증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선제적 건강정책을 추진해 모든 도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6일 고흥에서 열린 '2025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96개 동 주민주도 생활자치 역량 키운다

워크숍 열어 성과 공유·정책 방향 모색 姜시장 “제도혁신 광주형 주민주권 완성”

광주지역 주민자치 리더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형 주민자치’ 활동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27일까지 이틀간 고흥 일원에서 96개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위원, 시·구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96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해 주민 주도 생활자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지역 내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광역시는 전국에서 광주시와 세종시 2곳 뿐이다.

이는 광주시가 지속 추진해 온 주민주권 강화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의 주민자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특강, 주민자치 유공자 포상,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의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향후 과제’, 권중희 글로벌NLP코칭아카데미 강사의 ‘감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려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자치 발전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도 열렸다.

김호성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국민포장을, 김재만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최지숙 월산4동 주민자치회장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

다. 송만복 운암3동 주민자치회장과 김종이 우산동 주민자치회장은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주민총회 확대, 자치계획 수립 지원, 공동체활동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동별 생활자치 역량을 고르게 높여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서구 풍암동과 광산구 송정1동이 우수상을, 서구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우수사례 10건 중 3건을 차지해 광주시가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평가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96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며 주민주권을 도시 전반으로 넓혀가고 있다”며 “법제화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광주형 주민주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힘 모은다

광주시·미술계, 내달 1일 소통간담회 진행상황 공유…숙원사업 긴밀 협력

광주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 미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오는 12월1일 동구 전일빌딩25층 중회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관 후보 부지·특성화 방향 등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 중부권에 청주관을 운영 중이며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광주시는 광주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광주관 건립 기본구상 수립,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 올해 6월에는 지역 미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포럼’을 개최,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과 특화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관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돼 가시화됐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됐고 지난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미술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지역 미술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유치 전략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시민배심원, 민선 8기 광주시 공약 조정

재정여건·행정환경 변화 따른 공약 점검

시민의 시선으로 민선 8기 광주시 공약 조정안을 점검·평가할 시민배심원단이 첫발을 뗐다.

광주시는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시민배심원 50명을 위촉하고 ‘2025 제1차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배심원들은 직접 체험한 지역 문제를 바탕으로 재정여건·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조정안을 평가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약과 정책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번 운영한다.

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아래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성별·연령·거주지를 배분한 시민 50명으로 선발됐다.

1차 회의에서는 강기정 시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배심원 분임 편성, 분임별 안전배분을 진행했다.

오는 12월9일 2차 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공약 조정 사유 설명과 분임별 토의가 이뤄지며, 12월16일 3차 회의에서 전체 투표를 통해 공약조정안을 확정한다.

광주시는 시민배심원단과 함께 마련한 공약조정안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수희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062)222-0037 / H. 010-4323-5252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평면 성곡리 31-6번지

CMYK